
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위기를 넘어 혁신으로,
강한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육성

2021. 12



중소벤처기업부



목 차



I. 그간의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6
III. 2022년 핵심 추진과제	8
①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	
②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·스타트업 육성	
③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	
④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	
IV. 2022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뀔니다	18
【별첨1】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	19
【별첨2】 그간의 성과/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...	22

I. 그간의 추진성과와 평가

①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디지털 전환 촉진

□ **(위기 극복)** 소상공인 특화 금융지원, 재난지원금 지급, 손실보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기여

① 소상공인 **정책금융**(융자+보증)을 확대('17. 13.9 → '21.11 26.4조원)하고, 특히 저신용자 중심의 **직접대출** 확대*로 금융사각지대 해소

* 직접대출(억원): ('17) 4,356 → ('18) 4,868 → ('19) 6,035 → ('20) 14,443 → ('21.11) 18,846

②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**16.2조원**의 **재난지원금** 지급(1,031만명, '21.11)

③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**손실보상**의 법적 근거(「소상공인법」 개정, '21.7) 마련, **빠르고 간편한 신청·지급** 시스템 구축('21.10)

□ **(정책체계 혁신)**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하고, 개별 상인에서 상권 단위 지원으로 **패러다임 전환**

① 소상공인정책실('17.7), 소상공인지원센터('17. 59 → '21. 70개) 등 **소상공인 전담 조직**을 신설·확대하고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정('20.2)

② 쇠퇴하는 **지역 상권**을 부활시키고(상권르네상스, '18. 3 → '21.11 25개), 지역 맞춤형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(「지역상권법」 제정, '21.6)

③ **온누리상품권** 발행을 확대('18. 1.5 → '21.11 3조원)하고, **모바일 온누리 상품권** 도입('19.9), **골목형상점가로** 사용처 확대 등 제도개선 병행

□ **(디지털 전환)** 급변하는 소비·유통 환경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

① **스마트상점**을 집중 육성하고, **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**('20~)

* 스마트상점(천개): ('20) 4 → ('21) 12 /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(개): ('20) 38 → ('21) 77

②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**간편결제**(제로페이, '19.1)의 결제액 및 가맹점수 지속 증가

* 결제액(누적, 억원): ('18) 1 → ('19) 767 → ('20) 11,529 → ('21.11) 33,256
가맹점수(누적, 만개): ('18) 1.6 → ('19) 32.4 → ('20) 72.9 → ('21.11) 135.4

② 혁신 벤처·스타트업 육성

□ **(제2벤처붐 안착)** '17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벤처투자 등을 통해 벤처·스타트업 생태계가 제2벤처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

① '17년 이전 연간 2조원 수준이던 **벤처투자액**이 '21년 3분기 역대 최초로 5조원 돌파('17. 2.4 → '21.1~9 5.3조원)

② '17년 대비 **유니콘기업**(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)이 5배로 급증*, **예비 유니콘기업**(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)도 3.4배 증가**

* 유니콘기업(누적, 개): ('17) 3 → ('18) 6 → ('19) 10 → ('20) 13 → ('21.9) 15

** 예비유니콘기업(누적, 개): ('17) 115 → ('18) 158 → ('19) 235 → ('20) 320 → ('21.9) 392

③ **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벤처·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**(10.2%)이 전체 기업(3.4%)의 3배로 벤처·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

* 벤처기업 고용현황(만명): ('20.6말) 66.0 → ('21.6말) 72.7 (+10.2%)

□ **(창업열기 확산)** 혁신인재들의 도전과 정부의 창업단계별(준비-초기-도약기)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의 양적·질적 개선

① '20년 **청년창업*** 및 **기술창업****은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

* 청년창업(만개): ('17) 42.6 → ('18) 44.3 → ('19) 44.0 → ('20) 49.1 → ('21.1~9) 38.3

** 기술창업(만개): ('17) 19.9 → ('18) 21.2 → ('19) 22.1 → ('20) 22.9 → ('21.1~9) 18.1

② **스타트업 파크**('19~, 3개 지정), **그린스타트업 타운**('20~, 2개 지정) 등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*('21.1) 하는 등 **창업 인프라 확충**

*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8% 이상(창업지원법 제5조의2 신설)

③ **CES 혁신상 수상기업**('19. 5 → '21. 21개) 및 **Forbes(美) 선정 글로벌 리더 증가**('16. 5 → '21. 15개) 등 **국제사회도 긍정적 평가***

* "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유니콘기업 보유, 글로벌 지향 스타트업 증가"(닛케이, '21.6)

* 전세계 43개국 중 '실패 두려움' 최저치 기록('19~'20 연속, GEM, '21.5)

□ **(제도 개선)** 「벤처투자법」 제정('20.2),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*(CVC) 허용('20.12) 등 벤처투자 제도의 정비 병행

* 대기업 집단 등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(VC) 소유 허용, 대규모 벤처투자 활성화

3 중소기업의 기술·수출 등 경쟁력 제고

□ (중기 R&D 확대) 전용 R&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

- ① 중기 전용 R&D 2배 확대('17. 1.1 → '21. 2.5조원)로, 매출·수출 증대 등 가시적 성과 시현(매출 35.6% ↑, 수출 405.7% ↑, 영업이익 31.8% ↑*)

* '15~'19년 수혜기업 21,857개 대상 조사(기정원, '20년)

- ② 투자형 R&D 등 시장친화적 R&D*를 도입('20.7)하고, 소부장·그린 뉴딜 등 혁신 분야**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성과 제고

* (투자형) 先 민간VC 기업 선별·투자 → 後 정부(모태펀드) 매칭 투자 지원

** (소부장 강소기업) 4년간 20억원(R&D), (그린뉴딜 유망기업) 3년간 30억원(R&D+사업화)

□ (스마트공장 확산)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 전환 지원

- ① 2.5만개('21.11)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스마트제조 기반 마련

* 스마트공장 보급(누적, 천개): ('17) 5 → ('18) 8 → ('19) 13 → ('20) 20 → ('21.11) 25

- ② '인공지능 제조 인프라(KAMP)' 구축('20.12) 및 표준모델(12종) 개발·보급

우수 사례

• 인공지능으로 설비고장 사전예측(고원금속) 장비의 진동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→ 부품 파손을 사전예측하여 불량감소, 산재예방 등

□ (국내외 판로 확대) 수출 역량강화와 공공구매 확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수출 버팀목 및 내수절벽의 완충역할 수행

- ① K-뷰티·방역 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'21년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 1천만달러 기업수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

* 중소기업 수출액(억달러): ('17) 1,032 → ('18) 1,052 → ('19) 1,009 → ('20) 1,007 → ('21.11) 1,058
수출 1천만달러 기업개: ('17) 1,625 → ('18) 1,747 → ('19) 1,606 → ('20) 1,480 → ('21.11) 1,834

- ②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로 선정('21.11 203개) 하고,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으로 수출액이 증가*하는 성공모델 창출

* 브랜드K 제품 수출액(억달러): ('20.상) 3.4 → ('21.상) 5.4 (+57%)

- ③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*이 지속 확대되어, '20년 역대 최대인 116조원 기록

*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액(조원): ('17) 92.2 → ('18) 94.0 → ('19) 105.0 → ('20) 116.3

4 대기업과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

□ **(상생협력의 지평 확대)** 상생협력 대상을 확대하고,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상생모델 추진

① 자발적 상생기업(자상한기업 35개, ~'21.11)과 협약을 체결하여, 비협력사·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, ESG 등 지원(123조원 규모)

* 다보스포럼(WEF, '20.1)에서 자상한기업 정책을 포용적인 성장모델로 평가

② K-방역(상생형 스마트공장), 일본 수출규제 극복(소부장 상생모델*) 등 새로운 상생모델을 도입하여 국가적 위기에 대응

* 17개 모델을 발굴·승인하고 정부·대기업·중소기업이 협업하여 기술개발 진행중

우수 사례

• **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통한 K-방역 신속지원(삼성전자-경림파마텍)**
: 단 1개월 만에 월 1천만개 이상의 최소 잔여형(LDS) 주사기 대량생산체계 구축

③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**상생기금** 출연이 크게 증가*하고, **상생결제액**도 4년 연속 100조원 초과**

* 상생협력기금 출연액(억원): ('13~'16) 4,964 → ('17~'21.11) 10,479(5,515 ↑)

** 상생결제액(조원): ('17) 93.6 → ('18) 107.4 → ('19) 115.6 → ('20) 119.9 → ('21.1~11) 127.1

□ **(공정한 거래환경 조성)**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, 중소기업의 기술보호,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① 수·위탁거래에 **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**를 도입('19.1)·활성화*하고, 불공정거래 직권조사에 **시정명령제** 도입('20.10)

* 납품대금조정협의제 활용기업의 96.6%(144/149개)가 납품대금 인상 합의 도달('21.3)

② **기술탈취 근절**을 위해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를 신설('18.12)하고, 비밀 유지계약 의무화, 입증책임 완화, 징벌적 손해배상(3배) 등 도입('21.8)

우수 사례

• **현대중공업-삼영기계** 기술침해 신고('19.6) → 행정조사 및 상생조정위 안건상정 → 조정권고 → 합의 도출('21.9), 기술침해 행정조사 첫 사례

③ **생계형 적합업종제도** 도입(「생계형적합업종법」 제정, '18.6)하여,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및 경쟁력 확보 기회 제공

*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/상생협약(건): ('19) 8/5 → ('20) 2/5 → ('21.11) 1/2

5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

□ **(규제자유특구 활성화)** '19년 세계 최초로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인 '규제자유특구'를 도입('19.4)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

① 비수도권 14개 광역시·도 모두에 29개 규제자유특구 지정(6차, '19.7~'21.11), 신기술 세부 실증사업 73개에 대해 144개 규제특례 허용

② 2건의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*하고, 10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등 성과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

* 개인용 이동수단(Personal Mobility) 관련 「도로교통법」('20.12월, 전남 규제자유특구), 블록체인 물류·투어 플랫폼 관련 「위치정보법」('21.10월, 부산 규제자유특구)

□ **(지역혁신 인프라 조성)** 「지역중소기업 육성법」 제정('21.7) 등 지역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, 위기대응 체계 구축

① (지역균형 뉴딜 촉진) 지역 주력산업*을 한국판 뉴딜 전략에 맞추어 개편하고 지역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가속화

* 지원예산(억원): ('17) 2,431 → ('18) 1,904 → ('19) 2,036 → ('20) 2,241 → ('21) 2,130

② (위기지역 집중지원) 경영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등을 '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'으로 지정하여(13개, '21.11), 세제 및 R&D 집중 지원

* 특별지원지역 성과('21): 지정 이후, 해당 지역 내 기업의 평균 고용 81.1명 창출 및 산업단지 분양률 15.7%p 증가(54.8% → 70.5%)

◇ **(평가)**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'중소벤처기업부'를 신설('17.7)하여,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

○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*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** 등 '부처'로서의 위상 정립

* 「생계형적합업종법」('18.6), 「소상공인기본법」('20.2), 「벤처투자법」('20.2), 「지역상권법」('21.6), 「지역중소기업 육성법」('21.7) 등 제정

* 각 부처·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및 성과평가 실시('19~)

○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, 제2벤처붐 조성·확산, 수출 확대 등 소상공인·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

II.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- **(경기회복·민생)** 소상공인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* 중이나, 개별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는 다를 것으로 예상

* 소상공인 매출동향(% '19년 동기비) : ('21.1) 79.3 → ('21.4) 90.0 → ('21.7) 89.1 → ('21.10) 96.4

- 확진자 급증 및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지속
 -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,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 필요
-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·수출 회복 속도 차이*,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험 요인 상존

* 대/중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(% 동기비): ('21.1Q) 6.1/△0.5 → ('21.2Q) 14.3/9.2 → ('21.3Q) 6.6/△0.1

대/중기 수출 증가율(% 동기비): ('21.1Q) 13.4/12.0 → ('21.2Q) 44.9/31.6 → ('21.3Q) 31.5/13.1

⇒ **소상공인의 안전망을 강화**하고 디지털 혁신 지원 ⇒ **과제 1**
상생·공정 기반의 포용적 경제성장 지속 추진 ⇒ **과제 4**

- **(경제구조 전환)** 디지털 전환, 탄소중립*, ESG 등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 환경의 변화 가속화

* EU는 철강·시멘트 등 고탄소 5개 분야의 수입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('21.7) 국가별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: (EU) '90比 △55%, (미국) '05比 △50~52%, (한국) '18比 40%

- 탄소중립, ESG 관련 국내·외 요구 증가 등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인식과 대응 부족

* 탄소중립 대응현황(중진공 '21.2): 준비됨(준비중 포함) 15.1%, 필요성은 인식 80.6%

** ESG 대응현황(중진공, '21.6): 준비됨(준비중 포함) 25.7%, 필요성은 인식 58.0%

ESG 대응수준(전경련, '21.2, 선진국 10 대비): (대) 7, (중견) 5, **(중소) 4**

- 반면, 경영환경 변화는 벤처·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

⇒ **혁신 벤처·스타업을 육성**하여 신경제질서의 주도권 선점 ⇒ **과제 2**
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⇒ **과제 3**

2. 업무추진 방향

비전	위기를 넘어 혁신으로, 강한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육성		
전략	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,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		
정책 방향	【 소상공인 】	【 벤처·스타트업 】	【 중소기업 】
정책 방향	①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	②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· 스타트업 육성	③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
세부 과제	①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 ② 소상공인 체질 개선을 통한 자생력 강화 ③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	① 기술·청년·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 ②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 ③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	①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② 탄소중립·ESG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선제적 대응 ③ 제조공정 스마트화,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
기반 조성	④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①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 및 골목상권 보호 ②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및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 ③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		

III. 2022년 핵심 추진과제

1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

- ◇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 보상제도 및 맞춤형 금융·재기지원 등 안전망 강화
- ◇ 온라인·비대면 소비환경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양성

1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

① **(손실보상)** 소상공인이 두렵고 신속하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하한액 상향 등 추진

-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외에 '시설 인원제한 조치'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*하고, 손실보상 하한액을 대폭 상향(10 → 50만원)

* 시설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 변경 및 「소상공인법 시행령」 개정('22.1)

② **(방역지원금 지급)**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('21.12~)

* 소기업·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(3.2조원)

③ **(부담 완화 지원)**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집중지원 및 임대료·수수료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추진

-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총 35.8조원의 저리 자금 공급

	대상 (만명)	규모 (조원)	지원내용
▶ 희망대출플러스 <금지·제한·경영위기업종>	100	10	▶ (저신용: 소진공 1.4조원) 연 1% (중신용: 지역신보 3.8조원) 연 1% (고신용: 신보 4.8조원) 연 1.5% ▶ 1천만원 한도
▶ 일상회복 특별융자 <인원·시설제한+여행·공연·전시>	10	2	▶ 연 1%, 2천만원 한도
▶ 소진기금 일반융자 <청년 신규창업자 등>	3	2.8	▶ 연 2~3%대
▶ 지역신보 시중은행 융자 <일반업종 등>	100	21	▶ 연 2~3%대
소 계	213	35.8	

- 착한 임대인 대상 세액공제·용자 등 지원 기간 연장('21.12 → '22.12),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* 확대('22. 160만개)

-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* 3.5조원 발행 및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** 등 연계 지원

* 온누리상품권 연도별 발행 목표(조원): ('21) 3.15 → ('22) 3.5

**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확대(안)(월, 만원): 70 → 100

④ (재기 지원) 위기(경영개선) - 폐업(사업정리·대출금 부담 완화) - 재도전(재취업·창업) 등 쏠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

-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(최대 2천만원)을 연계 지원하는 '경영개선패키지' 신설('22. 238억원, 1천명)

- 신속·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*·채무조정 등을 지원('22. 420억원)하고 브릿지보증** (5천억원)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

*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지원 단가 한도 확대(만원): ('21) 200 → ('22) 2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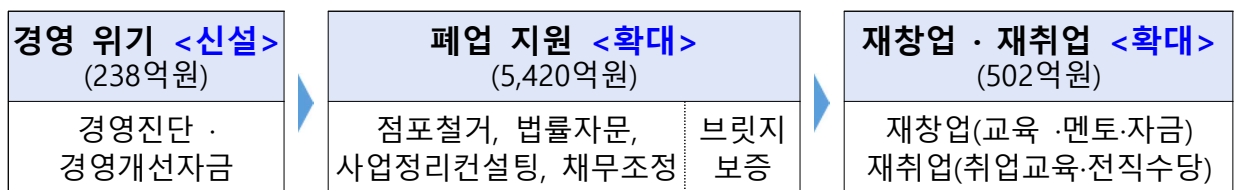
**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및 5년간 대출 연장 / 보증료 0.5%p 감면(1→0.5%)

- 재취업*·재창업**을 위한 교육·자금 등 연계 지원('22. 502억원)

* 직무·직능 교육, 수요연계 취업교육, 전직장려수당 지급(최대 1백만원)

** 재창업 및 업종전환 특화교육, 멘토링, 사업화자금(최대 2천만원)

< '22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계획 >



② 소상공인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

① (디지털·온라인) 소비·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상권정보 제공 및 스마트·디지털 지원 확대

- 분산된 상권정보*를 빅데이터 플랫폼화**하여, 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·정확하게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

* (국세청) 상가·매출, (행안부) 주거인구, (통신사) 유동인구, (카드사) 소비동향 등

** 상권통계 분석·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추진(~'22.2) → 빅데이터 플랫폼화(~'23)

- 지역·업종을 고려한 **맞춤형 스마트기술을 보급·확산**하여 전국 5천여개* 점포를 **스마트상점·공방·마켓**으로 육성('22.하)

* 스마트상점 4,000여개, 스마트공방 1,000여개, 스마트마켓(신규) 100여개

- 맞춤형 교육, 상품발굴, 배송인력 등 전통시장의 **온라인 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***을 통한 **디지털 전통시장 확산**('22. 34개, 34억원)

* (온라인진출) 온라인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, 전문 MD를 통한 상품발굴·마케팅 등 (배송인프라) 배송인력, 오토바이, 냉장고 등 인적·물적 기반

-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**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**을 도입*하고 **카드·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**('21. 0.35 → '22. 1.5조원)

* 기존 보유 카드(신용·체크)를 전용 앱에 등록·충전 후,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

② (매출 기반 조성) 신시장 진출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

- 정기결제 기반의 **구독경제 활용 촉진**을 위한 **바우처를 지원***('21. 15 → '22. 52억원)하고, **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**('21. 2곳 → '22. 5곳)

* 결제시스템 도입, 유통서비스(풀필먼트) 등에 활용(업체당 1천만원 내외)

-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**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***하고, 국내외 **인지도 확산**을 위한 **체험존 운영**('22. 인천공항 2개소)

*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지원(누적, 종): ('21) 25 → ('22) 60

③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

① (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) 「지역상권법*」 시행('22.4)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**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**

* 상인·임대인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, 재정, 특성화 사업 등의 특례 지원

② (상권 내 빈점포 활용) 상권조합이 빈점포를 **매입·임대**하여 공실을 해소하고, **상권내몰림(젠트리피케이션) 방지** 등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*

* (내용) 매입자금 융자 보증 지원, 임대료 인하액 50% 지원 (일정) '22. 상권 실태조사·타당성 확인 → '23. 시범사업 추진(10개 상권)

③ (상권르네상스 확대) 상권의 **범위***를 확대하고 디지털 등 사업 분야를 **다양화**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**지원대상**** 확대 추진

* 상권 규모 기준 최소 점포수(개): (기존) 400 → (개편) 100

** 상권르네상스 사업(누적, 개): ('21) 20(예산 178억원) → ('22) 28(예산 258억원)

②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·스타트업 육성

- ◇ 혁신 창업을 중심으로 창업열기를 지속·확산하고, 모험자본과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
- ◇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 집중 육성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중점 추진

① 기술·청년·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

① **(기술 창업)**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* (7→10년) 하고, 창업사업화 예산의 40%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

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('21.12) → 시행('22.상)

- 보다 많은 민간 참여를 위해 **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(TIPS)의 운영사** 범위를 확대*하고, **분야별 특성에** 맞춘 운영사간 컨소시엄도 허용('22.하)

* (기존) 창업기획자 → (확대) 벤처캐피탈, 해외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

- **제조 기반 창업 활성화**를 위해 **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** 확충 ('21. 20 → '22. 30개)하고, 제품화를 위한 **정보제공 플랫폼 본격 운영**

- **바이오 창업기업의** 실험·연구 인프라, 창업지원 및 관련 **네트워크**를 종합 지원하는 '**K-바이오 랩허브**' 지속 추진('22.상, 예타)

② **(청년 창업)**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'**창업중심대학**'으로 지정('22.상, 전국 6곳 대학)하고, 지역의 **청년창업거점**으로 육성*

* 예비·초기·도약 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자격 5년간 부여, 대학당 75억원 지원

-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**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창업**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'**창업 친화적 학사제도**' 개선('22.상)

* (현재) 창업휴학은 2년 이내로 권장 → (개선) 기간 제한 삭제, 「고등교육법」에 창업휴학 사유 추가

- 뛰어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들이 **TIPS 프로그램**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**청년 전문·특화 TIPS 운영사 선정 및 육성**('22.상)

- **청년 창업기업이 적기에**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아 **성장**할 수 있도록 **청년창업펀드**를 1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('22.상)

- 창업기업 맞춤형으로 인공지능(AI) 인력을 육성*하고, 청년창업사관 학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도록 창업정책 추진('22.하)

*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: 4대 분야(게임, 금융, 유통, 바이오) 인재 집중 양성

③ **(지역 창업)** 투자형 창업지원 방식 도입 검토* 등 창조경제혁신 센터의 우수 창업기업 발굴·지원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('22.하)

* 지역별 시드머니 투자 기능 확보, 지자체파트너 대기업 등의 지역 스타트업 투자 참여 건인

-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로컬크리에이터간 협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선도기업*과의 연계 지원도 강화

* 플랫폼 기업 등과 로컬크리에이터간 판로·마케팅·투자 등 협업 통해 사업고도화 지원

- 지역 창업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('98~)의 입주대상을 확대*하는 등 제도 개선 병행

* (기존) 창업 3년 이내 → (개선) 창업 7년 이내 및 창투자, 창업기획자도 입주 가능

② **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**

① **(모험자본 확대)**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하여, 2조원 이상의 벤처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 공급

- 초기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('22.3),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의 벤처펀드 결성요건 완화*('22.상) 등 창업초기투자 강화

* 「벤처투자법 시행령」 개정: (현재) 20억원 → (개정) 10억원

② **(인재 유입)**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, 과세이연 확대 등 세금 부담을 완화*하고, 표준계약서·메뉴얼 등 보급·교육('22.상)

* 비과세 한도를 상향(3천만원 → 5천만원)하고,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 허용 등(개정 「조특법」 '22.1 시행 예정)

- 기업이 직접 선발·교육하는 현장실습형 훈련과정인 '벤처·스타트업 아카데미'를 정식 출범하여 1,200여명 훈련 추진('22.상)

③ **(스케일업 지원)** 성장을 위한 전용자금('22. 1.62조원) 등을 포함하여, 중소·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총 31.6조원의 자금공급('22.1~)

* 중진공 용자 5.1조원, 기보 보증 26.5조원

- 유니콘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'예비유니콘 특별보증' 한도를 2배 상향(100→ 200억원)하는 등 'K-유니콘 프로젝트'의 고도화 추진

④ **(제도적 기반 마련)** 「벤처기업법」의 일몰기한을 폐지(現 '27년, ~'22.12)하고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('21.12 국회 산중위 통과)

- 투자조건부 용자·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美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 도입(「벤처투자법」 개정, '22.상)

⑤ **(외수시장 활성화)** M&A펀드('21. 2.2 → '22. 2.35조원, 누적) 및 중간회수 펀드(1,000억원 신규)를 조성하고, M&A 관련 투자제도 개선*('22.하)

- * M&A 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, M&A 목적 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등(「벤처투자법」 개정)

③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

① **(규제자유특구 성과 창출)** 중소기업의 수요에 기반*하여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구 지정(5개 내외, '22.상) 및 안착화 지속 추진

- * R&D,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과제 발굴

-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특구 사업의 규제법령 정비, 임시허가 전환 등 안착화를 추진하여 실증사업 성과 창출
- 유사 분야 '특구간 협력 네트워크'를 구축·운영하여 기술교류·공동사업화·규제법령 정비 공동대응 등을 추진('22.상)

- * (예시) 미래교통: 세종 자율주행, 경남 무인선박,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등

② **(지역기업 육성)**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·육성*('22. 100개) 하고,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 기능** 강화

- * (정부) 협업과제기획, R&D(최대 6년간 20억원), 정책자금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 (14개 시·도) 산단·지식산업센터 입주, 지역투자보조금 우대, 시험장비 지원 등

- ** 지역 위기대응시스템, 지역밸류체인 조성 등 지역 혁신정책 주도적 운영('22.5)

- 그린뉴딜 유망기업('22. 15개) 및 소부장 강소기업('22. 20개)을 추가 선정하여, R&D·사업화 등 집중 지원(비수도권 비율 56%)

③ **(지역뉴딜 벤처펀드 확대)** 지역 소재 민간·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협력하여 지역뉴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지속 확대(~'24. 5천억원)

- 모태펀드 출자('22. 600억원)를 통해, '21년 조성 권역(부산, 충청, 경남·울산)의 투자를 본격화하고, 추가 조성 권역 발굴 추진

③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

◇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·ESG 등 경제 구조전환에 적응하도록 사업전환과 경영애로 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

①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

① **(대상 확대)** 사업전환 범위를 기존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·서비스 도입, 사업모델 혁신까지 확대(「사업전환법」 개정, '22.상)

* (기존)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 → (확대) 새로운 제품·서비스 및 제공방식 도입까지 인정

② **(지원 강화)** 사업전환자금을 대폭 확대('21. 1,000 → '22. 2,500억원)하고, 대·중기 및 중기간 공동사업전환 제도* 신설

* 대·중소기업,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전환을 통해 성공가능성 제고 및 상생협력 촉진

③ **(규제 해소)** 중소기업 음부즈만과 연계하여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 및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규제 개선 지원

④ **(체계 정비)**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노동전환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*을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 신설('22. 10개소)

* (홍보·수요발굴) 협단체·TP·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요기업 발굴 → (진단·컨설팅) 기업 진단 및 전환계획 수립 지원 → (연계지원) 자금 등 지원사업 연계

② 탄소중립, ESG 및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의 선제적 대응

① **(탄소중립 지원)** 고탄소 업종*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·지원하고,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

* 화학제품, 비금속, 1차금속, 금속가공, 식료품, 플라스틱, 펄프종이 등 10개 업종

-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·확산,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,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 체계적 지원

* 중소기업 전용 탄소중립 예산(억원): ('21) 2,397 → ('22) 4,744 (2배↑)

-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탄소중립 친화적으로 개편하고, 체계적 지원을 위한 中企 탄소중립 통계·정보체계와 법적근거* 마련

* 「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특별법」 발의('21.1) → 국회 산중위 법안소위 회부('21.3)

② **(ESG 지원)**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(체크리스트) 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, 업종별 특화지표*를 개발·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

* 글로벌기업 요구사례의 수집·분석을 통한 규모·업종·기업특성별 지표

-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의 지역확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

③ **(GVC 재편 대응)**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*을 국내에서 생산·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, 중소기업 영향을 심층분석('22.상)

* (예시) 마그네슘, 텅스텐, 이산화규소, 망간, 흑연 등

- 중소기업의 특정국 수입의존도 감소 및 GVC 재편 대응을 위한 컨설팅·자금·R&D 등 패키지 지원 추진

* GVC 재편 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(유턴기업)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

③ 제조공정 스마트화,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

① **(스마트공장 고도화)** 그간 저변확대를 기반으로 고도화 추진

- K-등대공장,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, 공장 단독형 지원 중심에서 네트워크형 혁신으로 확대('22, 662억원)

- 제조데이터의 공유·거래·활용을 위한 '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'('22.상) 및 대기업·지역 데이터 연계 플랫폼* 신설('22.상)

* (예시) SK 에너지의 데이터, 설비관리시스템 개방 → KAMP를 통해 석유화학 중기에 보급

- 인공지능(AI) 스마트공장 관리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 추진('22.상)

② **(수출 확대)** 국가대표 공동상표 '브랜드K' 지정 확대('21. 203 → '22. 300개), 국내·외 플래그십스토어('22. 2곳) 운영 등 마케팅 지원 강화

-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및 물류전용 수출바우처('22. 119억원) 지원 등 수출 물류애로 완화, 특송물류 할인 서비스* 신설 등 추진

*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에 DHL, FedEx, UPS 등 특송사와 협업하여 운임 할인 지원(32~66%)

③ **(공공구매 내실화)** 다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투명성·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('22.3)

* (경쟁제품 지정)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업종별 전문위원회 도입, 추천요건 및 절차 강화 등 (직접생산확인) 확인업무 내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, 위반기업 제재 강화 등

4] **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**

◇ 온라인플랫폼 관련 기업간 상생을 도모하고, 수·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며,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

1] **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 및 골목상권 보호**

① **(공정성 확보)**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*하여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 해결

* 배달플랫폼 상생협의회(20.9월~): 배달앱 3사, 소상공인 협·단체가 참여하여 점포별 과거 주문내역 제공, 허위 리뷰 최소화 등 10개 과제 개선

-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,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「상생협력법」 개정 추진

* 「상생협력법」 개정안 발의('21.2) → 국회 산중위 법안소위 회부('21.4)

② **(골목상권 보호)**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적합업종을 비즈니스 모델별로 지정하는 방식 도입 검토

* (현행) 대·중소기업의 업종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경우 적합업종 신청 가능
→ (개선) 업종이 달라도 비즈니스모델이 같은 경우 적합업종 신청 가능

< 비즈니스모델 지정 방식 (예시) >

구분	판매방식	현행		⇒	개선	
		표준산업분류	신청		비즈니스모델	신청
애완동물 용품 소매	오프라인	애완동물 용품 소매업	○		애완동물 용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모델	○
	온라인	전자상거래 소매업	X			

- 그동안의 적합업종 사례 분석,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을 검토(~'22)

2] **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및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**

① **(연동제 시범 운영)** 일정한 요건*을 충족한 경우 표준계약서** 사용을 권장하여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 운영('22.상)

* 원자재 활용비중이 높고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경우 등 (예시: 알루미늄, 구리 등)

** (예시) 연동 대상 원자재, 기준가격, 납품단가 조정시기, 방식 등 명시

② (납품대금 조정 실효성 제고) 중소기업 협동조합 외 중소기업 관련 단체도 협의주체로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**협상력 제고**(「상생협력법」 개정, '22.하)

* (현재) 수탁기업, 중소기업협동조합, 중소기업중앙회 → (추가) 중소기업 관련단체

- 수탁기업의 **협상력 제고**를 위해 협동조합의 협의 신청시 필요한 **신청요건 완화**(「상생협력법 시행령」 개정, '22.하)

* (현재)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중 1개 이상 지표의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% 이상
→ (개선안)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증가액의 합산분이 잔여 납품대금의 일정수준 이상

- 공공기관 **동반성장평가** 시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**활용**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등 우대하여 **공공기관의 참여 확산**(‘22.상)

-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**납품대금 조정**을 못하도록 하는 **부당특약** 등을 집중 조사*하여 **시정 추진**(‘22.하)

* 수위탁거래 실태조사(1.5만개)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, 부당한 거래조건 발굴·개선

③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

① (자상한기업 확대) 탄소중립, ESG 등 핵심 분야의 자상한기업을 10개 신규 선정(~'22.12)하고, 기존 자상한기업('21. 35개)과도 추가 협약 추진

- 자상한기업과 중소기업·소상공인 간의 **상생협력 지원** 및 우대를 위한 **법적 근거**를 마련(「상생협력법」 개정, '22.하)

② (민·관 상생협력 활성화)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**연계·상생형 지원사업***을 추진(‘22.상)

* (예시) 백년가게 선정(중기부) + 밀키트 개발·판매(이마트, 프레시지) → 백년가게 해외진출 K-뷰티 제품 등 브랜드 선정(중기부) + 온라인수출 지원(비자쇼퍼파이) → 해외 화장품시장 진출

- 자상한기업, 관련 **협·단체**가 참여하는 **‘자상한플랫폼’**을 구성하여 상생협력 과제 발굴(‘22.상)

③ (상생결제 확산)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미준수기업 **시정조치*** 실시, 상생결제 **동반성장평가 강화**(‘22.상)

* '22년 수·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반영하여 시범실시하고, '23년부터 본격 시행

- 중기부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**상생결제를 시범 도입***하고, 행안부 주관 **지자체 합동평가**에 상생결제 실적 반영 추진(‘22.하)

*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정부·지자체로 확산

IV. 2022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

소상공인 회복

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윗목까지 퍼지도록 민생회복에 주력합니다.

피해회복

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, 위기극복·재도전을 지원합니다.

* 손실보상 확대 추진, 방역지원금 지급, 저리 자금 35.8조원 공급

경쟁력

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소비자와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.

* 디지털 전통시장 34개 지원,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

지역상권

지역 상권·전통시장이 매력적인 창업·쇼핑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.

* 지역상권법 시행, 상권르네상스 28개 지원



벤처 스타트업 육성

코로나19에도 창업하는 활기찬 나라, 2022년에도 이어갑니다.

창업열기

청년들을 중심으로 혁신 창업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집니다.

*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, 신산업분야에 창업사업화 예산의 40% 배정

생태계

모험자본·우수인재가 모여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이 강화됩니다.

* 벤처·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,200명 양성, 복수의결권 도입, 스톡옵션 확산

혁신기업

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기업들이 성장합니다.



중소기업 성장

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합니다.

사업전환

중소기업의 신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.

* 사업전환자금 2,500억원 공급, 구조혁신 지원센터 10개소 지정

패러다임

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.

*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화 지원, ESG 인식개선

경영애로

생산성·판로·금융·인력·기술 등 경영애로 지원도 강화합니다.

* 스마트공장 고도화, 브랜드K 300개까지 확대



상생협력 기반조성

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됩니다.

플랫폼

온라인플랫폼 관련 갈등도 상생을 통해 해결합니다.

납품대금

원자재 가격 인상, 대금지연 걱정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.

*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, 상생결제 확대

자발적상생

정부·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이 상생협력이 확산됩니다.

첨부 1

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

국정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<p>27 더불어 발전하는 대·중소 기업 상생협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·중소기업간 사업영역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·지정 1건(떡국떡·떡볶이떡 제조업), 상생협약 2건(보험대차서비스업, 당면제조업) - 업종별 경쟁력 강화지원사업(21. 총 26개 과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업종 (11종) 이행점검 - 생계형 적합업종 既지정 업종 영향분석 실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교섭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·확대하여 법률상담, 분쟁조정 등 지원 * 법률상담: ('20) 1,229건 → ('21.1~11) 1,323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쟁조정 기능 강화 (「상생협력법」 개정) -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·공공기관 등 158개 4,346개 협력 이익공유 과제 발굴 * ('19) 56개, 561과제 → ('20) 106개, 1,992개 과제 → ('21) 158개, 4,346개 과제(누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 확대('22. 200개) -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(「상생협력법」 개정) - 협력이익공유 우수사례 발굴·확산(~'22. 200개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·중소 상생협력으로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부장 강소기업 120개, 스타트업 40개 선정하여 R&D 등 종합지원 * 강소기업: ('19) 54개 → ('20) 100개 → ('21) 120개(누적) 스타트업: ('20) 20개 → ('21) 40개(누적) - 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로 '상생모델' 17건 발굴('20) 8건 → ('21) 17건(누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부장 강소기업 확대 * ('22) 140개 → ('23) 160개 - 소부장 스타트업 확대 * ('22) 60개 → ('24) 100개 - 소부장 상생모델 확대 * ('22) 30개 → ('24) 50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·확대(35개)로 123조원 규모** 민간협력 추진 * ('19) 10개 → ('20) 25개 → ('21) 35개(누적) ** 금융지원(99조원), 투자지원(4조원), 판로확대(19조원), R&D·사업화 등(0.5조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자상한기업' 지속 발굴 (~'23년까지 50개) - 성과확산을 위한 이행점검 및 우수사례 홍보 등
<p>28 소상공인·자영업자 역량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누리상품권 298조원 발행, 294조원 판매('21.11) - 51,681개 점포 대상 화재알림시설 설치(누적) - 188개 시장 노후전선 정비 실시(누적) -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80.7% 달성(1,163곳) - '21년 77개 시장에 온라인플랫폼 입점(21.11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누리상품권 3.5조원 발행(~'22) - 화재알림 시설 8만개 설치(~'22) - 전통시장 대상 주차장 1,210개 보급(~'22) -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200개 입점(~'22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독경제 대책 마련('21.8), 스마트플래그십 스토어 등 인프라 6개소 신규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클린제조환경조성 확대 지원 ('22. 2,000개, 신규) - 소상공인 온라인·디지털화 지원 강화

국정 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화, 오염물질 저감 등 1,638곳에 환경 개선 비용 지원(‘21.11) - 스마트오더 1.5만개, 스마트기술 0.4만개 스마트 기술 보급(‘21.11) - 제로페이(간편결제) 결제액 3.3조원 달성 * 가맹점 135.4만개(신용카드 290만개) 돌파(‘21.11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온라인채널 입점지원, 역량강화, 구독경제 추진 등 지원 확대(‘22.6만개) - 스마트상점·공방 확충(‘22. 신규 5,000개) - 간편결제 가맹점 160만개로 확대(~‘22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점가 육성 및 보호 - 상권르네상스 25곳 선정(‘21.11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권르네상스 사업 ‘22년까지 30곳 이상 선정(디지털르네상스사업 3곳 선정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상공인·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-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(53만개, 1.5조원 지급, ‘21.10~11) -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(1,031만명, 16.0조원 지급, ‘20.9~‘21.11) - 폐업소상공인 지원 재도전장려금 267,620명 지원(~‘21) -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16만명(~‘21) - 고용보험료 13,743명 지원(~‘21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난지원금 지급이력 정보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·운영 - 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“경영개선패키지” 신설·지원(238억원, 4,000건) - 집합금지,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가입장려금 지원(~‘22. 10만명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39] 혁신을 지원하는 창업국가 조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- 벤처펀드 결성액* 및 벤처투자** 역대 최대치 달성 * (‘20.1~9) 3.0조원 → (‘21.1~9) 5.1조원 ** (‘20.1~9) 2.9조원 → (‘21.1~9) 5.3조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 벤처투자 5조원 달성 -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 구조 도입(‘22. 「벤처투자법」 개정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창업 활성화 - 신설법인(12.3만개, ‘20), 신규창업(148.5만개, ‘20) 역대최대치 기록 - 청년창업 대책(‘21.5), 청년정책과 신설(‘21.9) - 국조실 협업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(‘21.8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창업자 육성 지원(누적, 만명) : (‘21.6) 5.1 → (‘22) 5.6(목표) - 중앙부처·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 통합공고 실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업기업의 성장(Scale-up) 촉진 - 혁신기업 선별을 위한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(‘21.2) -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400개 육성(‘21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22년 로컬크리에이터 200개 발굴·육성 - 「창업지원법」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추진(~‘22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도전 인프라 확충 - 연대보증 및 부실채권 단계적 정리 * 연대보증 폐지(조원): (‘18) 5.4 → (‘21.11) 37.8 * 부실채권 정리(조원): (‘18) 1.4 → (‘21) 5.1 - 재도전 사례공모전, 실패박람회(행안부 합동), 재도전의 날 등 재도전 인식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창업자 5.5천명 * 재창업자수(누적, 천명): (‘21.11) 5.1 → (‘22) 5.5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 - 유니콘기업 15개(‘21.9),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기업 392개(‘21.9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니콘기업 20개 -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기업 500개 육성

국정 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40 중소기업 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효율화 - 중소기업정책심의회 2회 운영 *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,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의결 - 171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·변경 사전협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내실화 * 사전협의 미완료 사업 예산편성 불이익, 사전협의제도 적용 범위 확대, 성과평가 결과 공개 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R&D 강화 - 중소기업 전용 R&D 예산 확대를 통해 2.47조원 지원(10,900개 대상) * R&D 2배 확대 목표(2조 1,670억원) 조기 달성 - 중소제조업 전반에 스마트공장 누적 2.5만개 보급('21.11 기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1년 R&D 수혜기업 (10,900개)에서 2.2만개 일자리 창출 * '20. 19,532명 - '22년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목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구매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-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116.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기제품 공공구매액 120조원 달성 목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-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* 1,058억원, 전년대비 17.4%↑ ('21.11 누적기준) - 수출 중소기업 지속 증가('21^e. 10.5만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2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1만개 육성 * 온라인 수출 단계별 지원 강화,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- 글로벌강소기업 대상 해외마케팅, R&D 등 * 수출액 5.9억달러, 전년동월대비 16%↑ ('21.10 기준) - 「중견기업법」 개정·공포('21.6) * 중견기업 지원확대로 성장걸림돌 제도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글로벌강소기업, 월드클래스 기업 1,200개 발굴 - 글로벌강소기업, 월드클래스 기업 일자리 창출 5,000개(누적) 달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- 「지역중소기업법」 제정('21.7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영위기인 산업단지 대상 중소특별지원지역 지정확대 * 국세·지방세 50% 감면, 제한 경쟁입찰·수의계약 적용 등
41 대·중소 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가고용제도 신설 - 청년추가고용장려금: '21. 신규 84,803명 - 청년내일채움공제: '21.11 청년 11.9만명, 기업 51천개소 신규 가입, 누적 청년 50.6만명, 기업 116천개소, 13.1만명 만기금 수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7만명 신규 지원(~'22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 - 인공지능, 데이터 기반 신산업·신기술 분야 16,308명 인력 양성 * 산학협력우수기술인력(15,146명), 신산업·신기술 분야(1,162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수요 맞춤형(신산업·신기술) 1.7만명 인력양성 * 산학협력(15,160명), 신산업·신기술 분야(1,580명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·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-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* ('16) 67.9 → ('20) 74.4% - 성과공유기업('21.11): 71,359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공유기업 10만개 달성 * 우수기업 홍보 등 중소기업 성과공유 문화 확산

“전통 방앗간에 체험을 더해 원주의 핫플레이스로”

- A씨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전통 방앗간을 이어받아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하던 중, **체험형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** 것에 착안하여 전통 방앗간에 로스터리 체험 등을 접목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.
- 이후 A씨는 **중소벤처기업부의 ‘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사업’에 참여**하여 4가지 종류의 참기름·들기름, 들깨라떼, 빼빼로, 젤라토 등 전통기름을 활용한 다양한 푸드·굿즈를 판매하는 **체험형 방앗간**을 창업했다.
- B 방앗간은 ‘21년 오픈 이후 **월평균 1,500만원의 매출**을 실현하여 10월까지 총 2억원 매출을 달성하였고, 780명이 SNS에서 팔로잉하고, 언론에도 8회 소개되는 등 **이색방앗간**으로써 강원도 원주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났다.



“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다”

- B사는 **제주의 특산물과 문화를 담은 수제맥주**를 제조하는 스타트업으로,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 껍질을 활용하거나, 지역의 자연과 방언(方言)을 모티브로 맥주를 제조하는 등 **지역성을 담은 제품과 브랜딩**을 지속하고 있다.
- B사는 ‘20년 ‘**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**’ 사업에 참여한 이후,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과 결합한 ‘**제주 한 달살기**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,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**지역경제에 활력**을 더했다.
- 이후, B사는 ‘20년 한 해 동안 **매출 약 320억원**, **신규고용 65명**, **투자유치 130억원**의 성과를 창출하였고, ‘20년 수제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28%로 1위를 기록하며, 국내 수제 맥주업계 최초로 ‘21.5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뤘다.



“글로벌 물류대란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이어집니다”

- 미국에 타이어휠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한진해운 파산, 코로나19 등으로 물건을 실을 배가 없는 물류 대란 사태에 부딪혔다. 수출 계약은 했는데 물건 인도가 지연되어 바이어 신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.
- 그러다 A사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. 물량이 적고 거래내역이 없는 중소기업도 국적선사 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. A사는 중기부의 도움으로 타이어휠 20만개를 무사히 미국 바이어에게 인도하여, 신뢰를 지킬 수 있었다.
-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류대란이 시작된 '20.11월부터 '21.10월까지 중소기업 화물 1.4만 컨테이너가 미국, 유럽 등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. '22년에도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및 물류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급격한 운임 상승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적공간 부족</p>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대</div> <div style="padding: 5px;"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중소벤처기업부, 중소기업진흥공단·국적선사 에이치एम코리아 합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호카림 450TEU에서 1,050TEU로 대폭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한기 기준 최대 최고치를 달성한 중소기업 수출 증진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 물량을 적극 지원 ✓ 중기부, 지난해 11월부터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 영도까지 총 44,000여에 걸쳐 총 9,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 <p style="font-size: x-small; text-align: center;">EU (European) - Korea (Korean) 2020년 11월 1일부터 10년간 무관세 무역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지원</p>
---	---	---

“스톡옵션 활성화로 벤처·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”

- 경기도에서 인공지능기반 에듀테크 기업을 운영중인 A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적절한 인재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다.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(IT)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연구개발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.
 - A사는 최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이 크게 확대*된다는 기사를 접했고, 매뉴얼과 계약서 샘플을 참고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평소 함께 하고 싶었던 대기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.
- *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('21.8.26, 벤처보완대책)
- '98년부터 운영된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, 벤처기업 4,340개가 67,468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임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벤처·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도별 스톡옵션 부여현황</p>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,000만원으로 상향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제혜택 확대</p>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2021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도 매뉴얼</p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font-size: x-small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0;">계약서 샘플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약서 샘플</p>		

“전기차 충전, 앱으로 간편하게 찾고 저렴해서 좋아요”

- 국내 전기차 보급이 20만대를 넘으면서 운전자들은 충전소 찾기와 충전시간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, A사가 충전기 제조, 운영, 유지보수까지 원스탑으로 충전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고 있다.
- A사는 국내 최대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회사로, 작년에 **그린뉴딜 유망기업 100**에 선정되었다. A사는 전국의 마트와 동네 곳곳에 충전소를 설치하고, 충전소 정보제공은 물론 초고속 충전 및 저렴한 충전을 위한 충전인프라를 늘려가고 있으며, '20년 상반기 대비 '21년 상반기 매출이 **73%** 증가했다.
- 중소벤처기업부는 '22년에 그린뉴딜 유망기업 15개를 추가선정하여 50개 선정을 완료하고, 이들이 그린분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R&D 및 사업화자금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


“신속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K-방역 확산”

- A사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‘루어락과 안전 보호 기능이 장착된 LDS 주사기’를 개발하였으나, 제품디자인 설계만 있고 생산체계는 갖추진 못한 상태였다.
-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해당 LDS 주사기의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되면서, 정부와 대기업 B사가 함께 A사의 대량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하였고, 이에 따라 4일 만에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고, 1개월 만에 월 1천만개 이상의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하였다.
-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전문성,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이 결합한 원팀의 노력으로 LDS 주사기 공급이 가능해졌으며, 중소벤처기업부는 '22년에도 1천여개의 대-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지원할 예정이다.

